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

- 정치지형의 변화와 교육시민운동의 새로운 과제 -

심 성 보 (부산교대 교수)

- I. 서론: 참여정부의 위기와 정체성
- II. 정치지형의 변화와 교육시민운동의 새로운 정치
- III. 교육시민운동의 새로운 과제

<참고문헌>

I. 서론: 참여정부의 위기와 정체성

참여정부의 성립은 ‘정치사회’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역동적 변화에 근거한 것이었다. 지난 대선에서 다수의 국민들은 정치게임의 룰을 정하는 정당, 선거, 유권자로 구성된 정치사회를 변화의 동력이 아니라 변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출범을 현실화시킨 힘은 붉은 악마, 촛불시위, 노사모 등 자발성에 기초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였다. 새 정부가 참여정부를 선언한 것 역시 사회변화에 대한 시민의 뜨거운 욕구를 적극 수용하고 시민과 더불어 개혁을 수행하라는 의지의 공적인 표현이었다고 보여진다.¹⁵⁾

15)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후보 개인에 대한 대중적인 인기, 선거전의 전개 과정에서의 상황적 행운, 일반시민들의 개혁에 대한 열망이 한편으로는 유연하게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필연적으로 결합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권창출에 결합한 요소들은 매우 복합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출범 6개월이 지난 지금 참여정부를 이끌어갈 국정개혁의 중심지표인 참여와 자치의 정신은 거의 실종되고 있는 듯하다. 많은 국민들은 참여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으려 하고 있다. 1년 전 그토록 적극적이고 열렬하게 서울시청광장을 뒤덮었던 수많은 시민들의 열기가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어졌음에도 그 열기가 정치개혁이나 교육개혁의 주체적 힘으로 발현되지 못하고 아예 회의적인 방관자와 구경꾼으로 돌아서고 있다.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치지형의 변화와 교육시민사회의 변동 속에서 새로이 출현하는 교육시민단체들의 새로운 정치 출현과 그 성격에 따른 교육시민운동의 새로운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II. 정치지형의 변화와 교육시민운동의 새로운 정치

식민지배가 남긴 과잉 팽창된 행정기제, 그리고 대외지향적, 종속적 자본축적 과정에 수반된 국가의 경제적 기능 강화와 분단구조에 수반된 안보위기 때문에 국가는 시민사회보다 과대성장되어 있었다. 이러한 반공규율국가(anticommunist regimented state)는 자본축적과 체제유지의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요구를 집성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행정권에 기반해 거의 자의적으로 추출과 배분의 정책, 억압적 배제와 선택적 융합의 전략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척됨에 따라 사회부문이 팽창되고, 교육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시민사회가 성숙해지자 상황은 달라졌다. 국가의 자의적인 지배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고 결국에는 1987년의 민주화로 이어졌다.

87년 1단계 민주화 과정 이후 한국민주주의 이행과정은 국민정부 성립 이후 2단계 이행과정으로 진입하였다. 국민정부를 2단계의 1기라고 한다면, 참여정부는 2단계의 2기인 셈이다. 참여정부는 50년만의 '첫번째' 야당정부였던 국민정부의 2기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두번째 야당정부인 셈이다. 어떤 점에서서는 반주류의 '야당' 정부라는 표현이 무의미해진 반독재세력의 독자적인 집권 2기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국민정부의 성립은 50년 만에 극우반공주의적 독재세력이 중심이 되는 구집권층 시대에서 중도자유주의적 반독재민주세력이 중심이 되는 신집권층 시대로 이행하였음을 보여준다. 87년 이후 민주주의 이행의 1단계와 2단계의 차이는 바로 이 점에 있다. 즉 과거 야당세력들이 집권당으로 민주개혁을 주도하는 핵심세력이 된 것이다. 구보수적 세력들의 입장에서 보면 '잃어버린 5년'에 이어 또 참아내야 할 '잃어버릴 5년'의 시기를 또 다시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임기 9개월을 지난 노무현 정권은 이미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보수화의 길을 밟으며 기대했던 개혁성을 많이 상실해 가고 있다. 대개의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통합적 비전 없이 사안 별로 상황논리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답습하던 구태

의연합을 예상보다 일찍부터 드러내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여정부가 놓여진 여러 현실적 조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첫째, 참여정부의 개혁을 수행함에 있어 국민정부보다 국가기구 장악과 개혁드라이브 추진에 있어 유리한 ‘상부구조적’ 조건을 구비하고 있음은 틀림없다고 보여진다. 현재의 국가기구 내에는 과거 극우반공주의적인 보수파 관료들과 상대적으로 새롭게 진입한 개혁적 그룹의 복합적 구성으로 되어 있다. 과거 국민정부 초기의 상황을 보게 되면, 집권층 내에 과거의 보수적 관료 및 성장주의적 관료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포위된 개혁’이었다(조희연, 2003). 그러나 지금은 국가기구 통제권 및 국가관료의 인적 구성에서 보수적 관료가 지배적이지만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장관과 그 밑에 민주적 교육정책보좌관이 임명되는 등 과거보다는 국가기구에 대한 통제력 및 인적 구성에서 참여민주적 교육개혁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다소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 및 상부구조 내에서의 역관계가 최소한 극우반공주의적인 보수적 관료와 중도자유주의적인 개혁관료 사이의 불균형이 일정하게는 변화함을 일부 보여준다. 언론, 재벌, 지식인 엘리트, 지역토착세력, 전통적 국가관료 등 5개 지배권력이 이완되고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가기구 및 국가관료층 내부에서도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구보수세력 세력에 유리하던 구도가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참여정부는 서교장 자살사건과 네이스 사태에 대처하는 방식에서 올바른 정책적 입장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참여정부의 지지기반 상반부분을 잠식당하였기에 그동안 상실된 교육개혁의 정체성을 복원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관료들에 의해 상당부분 교육개혁이 포위되어 가고 있다. 학교민주주의를 치밀하게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학교의 참여민주주의가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교육계 수구세력의 조직적 준동을 막지 못하고 말았다. 교육부문은 더욱 보혁구도로 재편되어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반기와 내년 총선국면까지 이러한 대립 구도는 보다 첨예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사태가 전개되게 된 일차적인 책임은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기본 철학이 분명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둘째, 참여정부를 받쳐주고 있는 하부구조의 성격을 올바르게 파악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종합적 교육비전이 없을 때 나타나기 쉬운 현상은 정부의 당면 상황에 따라 교육외적 변수가 교육정책에 전이되어 교육현실을 왜곡시키기 쉽다. 현재 한국의 현실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왜곡현상은 바로 한 사회의 하부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경제의 논리가 교육 자체의 논리를 압도하고 있다(한만중,2003). 상부구조에 속하는 교육부문이 경제적 토대의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육의 자율성까지 압도하는 현실은 왜곡된 정책의 결과이다. 그런 조건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은 국제적으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흐름이 강화되면서 교육부문도 시장의 하위 영역으로 편입되는 경향에서 단적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교육시장’, ‘수요자 중심’, ‘경쟁력’ 등의 개념이 교육부문의 일상 담론으로 편입되고 있다. 그에 연동하여 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이 어느 새 시장의 ‘적자생존’ 논리로 전가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장관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교육개방은 경제부처의 주장대로 이루어졌다. 또한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도시에 자립형 사립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고,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완화에 대한 입장을 다시 개선하는 등 경제부처의 정책 개입 양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인천 지역과 고양, 평택 등 경기도 지역 전반에서 외국인투자유치방안이라는 명목으로 외국인학교의 설립과 국내 학생의 입학은 더욱 확대될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의 상대적 진보성의 실체가 집권후에 정책추진과정에서 수구 세력과 자본의 입장과 타협과 선회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를 대신하여 삼성(전경련)에서 제기한 2만불 시대론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는 등 성장주의, 시장주의로 선회하는 ‘신우익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조짐은 노무현 지지세력 내부에 혼돈과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있고, 수구세력은 아마추어들의 국정 운영의 실체를 조롱하면서 정책의 순치에 만족하고 있다. 그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개혁에 대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개혁

적 비전의 부재와 실천력이 불충분한 데에 있으며, 교육정책 추진세력이 민주적 세력의 통합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성이 상실되고 보수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안문제에 대한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인식과 대응을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 이후에 개혁의 방향과 주체,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하고, 개혁과제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상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심초사하던 수구세력은 개혁의 속도를 늦추거나 개혁자세를 무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그동안 보수 수구세력의 물질적 이데올로기적 기반이었던 교육분야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기존에 한국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고 교육권력을 독점해온 이들이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 시민운동적 방식까지 동원하여 활동을 전개하게 된 것은 교육부문의 지형이 달라지게 된 것을 반증한다.

민주정부 3기를 맞이한 현재 반독재적 민주세력(국민정부)의 집권의 등장으로 구집권층 시대로의 이행(한나라당의 집권)이 불가능한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다른 한편 시민사회의 개혁적 세력들의 총연합에 의해 비로소 참여정부의 탄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는 참여정부하에서 시민사회 내의 진보개혁적 목소리가 강력하게 분출될 것임을 예고한다. 다소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참여정부 하에서는 국민정부 하에서보다 민중부문 및 시민사회 일반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제 2의 민주주의 이행기를 맞이하여 국가에 의한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적 억압이 약화되고 자유로운 활동공간이 확장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큰 흐름으로 공감대를 이루며 나타난 것은 바로 개혁에 대한 기대였다.

그동안 사회운동의 지형이 복잡화하는 과정에서 교육운동을 포함한 모든 사회운동은 진보진영의 독점물에 가까웠다. 왜냐하면 보수진영은 국가의 제도 안에서 기득권을 지키는 데 힘을 쏟았고, 진보진영은 기득권을 혁파하며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하면서 운동권의 일방적 주체로서 기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런 구도가 깨어지기 시작하였다. 사회전반의 민주화 추세에 따라 보수 세력이 기득권을 많이 상실하면서

스스로 운동의 장에 뛰어들고 있다. 우리 사회의 보수세력들이 과거 반독재세력의 집권기가 장기화되면서 주류적 의식을 포기하고 비주류적 의식을 갖기 시작하면서 ‘방어적 위기의식’에 기초한 적극적인 행동을 벌이고 있다. 그것은 시민사회의 보수세력을 능동화 하고 자기이해의 방어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 표출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지금 우리 사회의 보수세력은 자신의 권리 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기표출을 감추지 않는다. 국민정부에 이어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보수세력 스스로가 탈(脫) 권력화되어 있다고 느끼면서 자기권리와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수평적 경쟁이라도 무릅쓰지 않으면 안된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된 것이다. 갑자기 우연적으로 다양한 집단행동이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니다.

민주정부의 성립으로 이전에 비해 개방적 공간을 향유하게 된 진보개혁의 사회세력이 더욱 목소리를 높히게 되면서 반대로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력이 박탈된 보수세력이 능동화된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반전교조 연대를 기치로 내세운 보수수구세력이 이른바 교육공동체시민연합(교시련)을 결성하는 양상도 이런 흐름의 반영으로 보여진다. 노무현 정부의 주요 과제로 선정되어 있는 보직제 등 교장제도의 다양화와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제화,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행정조직의 개편, 임명제 교장제도의 개혁, 사립학교법 개정 등은 교육관료들을 정점으로한 수직적 통제구조의 해체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를 기반으로한 수구세력들의 존재 기반을 상실한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보수세력의 능동화는 어떤 점에서는 ‘다원적’ 사회로 가는 과도기적 조짐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보수적 세력이 강력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강력하지만 이전보다는 보수세력의 힘이 많이 약화되었고, 반대로 개혁진보적 세력들은 여전히 취약하지만 이전에 비해 상당히 강력하게 되면서 정치지형의 변화로 새로운 학부모단체나 시민단체가 출현하는 것이다. 진보운동의 독점시대가 마감되면서 수구세력의 보수적 교육운동을 자임하는 단체가 등장하고 있다. 이제 보수적 교육단체와 진보적 교육단체가 수평적 경쟁의 단계로 진입하는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헤게모니¹⁶⁾ 쟁탈전에 진입하고 있다.

보수적 학부모들이 모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들의 모임>(학사모)이나 중도적 오피니언 그룹이 발의한 인터넷신문 <업코리아>(UpKorea), 그리고 일부 변호사들이 <제3의 변호사단체>를 결성하려는 움직임도 새로운 정치지형 및 교육지형의 변화와 맥락을 같이 한다.¹⁷⁾ 언뜻 외관상으로 보면 이제 우리 사회도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수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경쟁하는 본격적인 민주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듯하다.

지난 15년간의 민주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지만 시민사회 내에 계층적, 이념적, 세대적 균열이 커진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물론 이런 균열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만, 중도적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위축돼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사회적 긴장 및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 사회통합을 중시하는 중도적 대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바로 이 점에서 최근의 변화는 일단 바람직한 흐름이다.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수의 목소리가 공존하는 민주사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런 흐름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 환영할 일이다. 현대사회의 많은 사회문제에는 하나의 정답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어떤 방안이라 하더라도 선형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거기에는 보수중도진보적 대안이 상호경쟁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스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조직들이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절충’하는 게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에 머물 가능성이 없지 않다. 새로 출현한 시민사회내 비정부조직들이 겉으로는 이익조정을 표방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자신의 이익대변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빈번해 ‘민주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들

16) 헤게모니란 지배계급이 지적, 도덕적, 정치적 지도력의 행사를 통해 창출하는 피지배 집단들의 동의를 말한다. 그리고 이 헤게모니가 형성·작용하는 영역이 다름아닌 시민사회다. 그람시가 강조하는 헤게모니 개념은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가 바로 이 시민사회에 뿌리내린 다양한 제도와 실천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데 있다.

17) 이들 새롭게 출현하는 단체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보면 표방하는 지향은 동일하지 않다. 교시련과 학사모가 보수주의에 가깝다면, 업코리아는 중도주의를 전면에 내걸고 있다. 교시련이나 학사모는 ‘안티 전교조’ 적인 성격이 두드러지고, 업코리아는 진보 성향의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 등으로부터 적잖은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3의 변호사단체는 진보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및 보수성향의 ‘헌법을 수호하는 변호사모임’과는 다른 목소리를 강조하고 있다.

단체가 힘을 발휘하면 약자를 더욱 불평등과 소외 지대로 내몰고 말 것이다. <교시련>이나 <학사모>의 태동은 이러한 사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학사모>는 순수하기 설립된 학부모 모임이라기보다는 관제적 성격이 짙은 관변학부모모임의 성격이 강하고 <교시련>은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학습권을 침해하였다고 고발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서교장 자살 사태 이후 태동한 이들 단체는 전교조의 활동이 강해질수록 활동이 커지는 것을 보면 조직의 자체적인 활동목표를 가졌다기보다는 전교조 흠집내기 전략을 통한 반대를 위한 반대의 반전교조적 운동을 통해 학교를 수구화하고 보수화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수구적 모임의 숨겨진 태동 배경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것의 핵심에는 바로 교육개혁을 저지하려는 다목적 속셈이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민주정부가 계속 들어서자 기득권 세력의 이해가 더욱 상실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하여 결성된 ‘반개혁적 보수동맹’ 성격을 띠고 있다. 교장단이 그토록 저항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노무현 정부가 ‘교장선출보직제’ 실시를 통해 교육권력구조를 민주화하려는 선거공약을 표방하였기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숨은 의도가 게재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학부모운동이 노동 영역에서는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조직화된 약자집단을 충분하게 대변하지 못한다고 보면서 보다 급진적인 경향의 학부모모임을 결성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민주학부모회를 건설하고 있는 것도 개혁적이라고 보여졌던 기존의 학부모회가 민중의 이해를 충분하게 대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도 관련이 있다. 민중세력과 시민세력의 분화 경향을 보이는 징후이기도 하다. 또 한편으로 전교조, 문화연대, 교수노조가 교육개혁시민운동(교육연대)의 시민성 지향을 넘어서는 민중 지향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구현하고자 <범국민교육연대> 결성도 같은 맥락에서 읽혀진다. 특히 최근 교시련이나 학사모가 보수언론의 힘을 받으며 전국적인 힘을 가지 화하려고 하자 지역단위의 새로운 민주시민단체의 결성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교육운동체의 출현은 우리사회에 대한 변화 욕구를 좀더 민주적이고 민중적이어야 한다는 바램과도 관련이 있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내에서도 좀더 전교조에 경도되지 않으면서 독립적이고 중도적인 교육운동을 해야 한다는 시민운동적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강하게는 전교조가 교육연대에서 탈퇴해 주기를 바라는 요청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요청은 서교장 사태와 NEIS 투쟁 과정 속에서 전교조의 정체성과는 이념을 달리하는 소속단체들의 입장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보수적 교육시민단체, 중도적 교육시민단체, 진보적 교육시민단체로 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시민세력내의 분화 양상을 보이는 징후이다. 고전적 의미의 시민(부르조아)이 후기 산업사회의 등장이후 사회가 다양화되고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 때로는 참여를 동시에 하는 NGO 운동이 등장하면서 시민의 개념은 폭넓어지게 되면서 시민의 개념 속에 민중과 중산층 등을 포괄하는 개념적 발전을 하게 된다.¹⁸⁾ 그러나 여전히 시민의 울타리에 포함되지 않는 민중사회가 존재한다는 차원에서 민중운동을 고수하는 세력도 여전히 존재한다.¹⁹⁾

18) 원래 '시민'이란 용어는 서양어의 bourgeois를 번역하여 쓰는 데서 시작하였는데, 그 낱말은 유럽의 근대화 흐름에서 귀족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일정한 자율성을 획득하며 부를 축적하여 농노가 사는 촌도 아니고 귀족이 사는 도회지도 아닌 그들의 마을(bourg 또는 town)에 자유롭게 거주하며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성안의 사람들', '읍내사람들(bourgeois)'에서 유래하였다. 그런데 알다시피 부를 축적하여 일정한 기득권을 획득한 부르조아는 귀족의 권력이 무너지자 대부분의 권력을 넘겨받았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대체로 성밖에서 사는 사람들인 무산계급의 대립 개념인 유산 계급의 대명사로서 시민을 칭하였다. 물론 그람시 계열의 좌파 이론에서 보듯이 다양한 계급이 주도권(헤게모니) 경쟁을 벌이는 포괄적 영역으로서 시민사회를 인식하는 흐름도 있었다. 어쨌든 오늘날 사회운동의 측면에서 대두되는 '시민'의 개념은 고전적 의미에서 말하는 부르조아(bourgeois)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산업화 이후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국가 영역이 아닌) 사회 일반에 활동의 주역으로 등장한 대중을 뜻하는 개념에 더 가깝다. 굳이 서양어로 표현하자면 영어의 citizen이나 프랑스어의 citoën에 해당할 것이다. 시민사회는 국가가 존재하고 시민사회라고 불리는 어떤 것을 단단히 묶어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할 때만 존재할 수 있다. 시민사회란 본질적으로 국가의 틀 안에서 의 시민조직이지만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누리는 제 3의 영역으로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할 때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

19) 과거에는 민중진영과 민족진영이 경합하면서 이른바 '운동권'을 형성하였다. 요즘은 시민 진영이 새로운 변수로 가세하면서 지형을 더 복잡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NGO는 민중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득권 집단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계급성을 초월한다. 또한, NGO는 운동의 목적과 목표가 민족 문제나 계급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매우 다양한 문제 의식에서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지향의 제한성을 초월한다. 그렇게 시민 진영은 매우 다양한 기반에서 다양한 대상을 포괄하기 때문에 민중진영보다 개량적인 경향을 갖는다.

한 사회가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보수와 진정한 진보가 생산적으로 토론하고 경쟁하면서 상호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그 동안 한국의 현실에서 보수적 운동을 자임하는 단체나 개인들을 관찰해 보면 진정한 의미의 보수 운동이라기보다 기득권을 지키거나 상실한 몫을 되찾기 위한 이기적 활동이라는 인상을 짙게 받는다. 그런 점에서 수구세력의 이익집단들이 사회운동 영역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보수운동 단체는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결국, 진보적 사회운동의 진정한 대화상대 그리고 선의의 경쟁상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그 점은 진보진영의 대응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새로운 교육시민단체의 출현은 다양한 목소리의 공존이라는 ‘다원주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많은 경우 사회적 강자의 논리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화와 타협’을 정착시키는 시민문화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정상적 발전을 더욱 어렵게 한다. 보수적인 교육시민단체, 중도적 교육시민단체, 진보적 교육시민단체 등으로 이념적 분화를 보이는 현실 속에서 진보·중도·보수의 생산적인 공존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출현하는 단체가 ‘무엇을 위해 공존해야 하는가’ 하는 공공선의 가치를 좀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김호기, 2003). 어떤 토론과 타협이라 하더라도 목적과 원칙이 있어야 하며, 이 목적과 원칙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하는 ‘공공선’의 차원에서 발생된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형식적 다원주의라기보다는 민주적 개혁과 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다원주의여야 한다. 다양성과 민주적 합의는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동전의 양면이다.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하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선을 향한 민주적 합의를 성취하는 것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Ⅲ. 교육시민운동의 새로운 과제

참여정부는 뚜렷한 개혁 방향과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적극적인 지지자들은 개혁의 동력으로 삼고, 다소 소극적이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지지자들에게는 일관된 의지로 이해시키고 설득하여 동참시키는 노력이 필요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시대의 요청과 정치적 필요에 따라 노무현 정부가 선택해야 했던 진보적 방향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설득의 노력이 부족하였다. 오히려 보수 세력의 견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진보성을 스스로 완화 시킴으로써 진보진영에는 실망을 안겨주고, 보수 세력에게는 다소 안심시키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동시에 '길들이기'의 고삐를 내어 주면서 견제의 자신감과 반대세력 결집의 틈새를 제공하였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개혁의 비전 통합과 세력 통합에 모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참여민주적 개혁의 미동을 조금 보이고는 있으나 선거공약과 정권인수위 보고서에서 나타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 교육민주화의 노력은 크게 보이지 않아 본질적인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현재 참여정부는 시민사회의 유리한 조건과 역동적 힘을 상승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약화되고 정책 기조는 차츰 우경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육시민운동진영에서는 교육 개혁의 주도성을 확보하고, 제도개혁을 이루어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1. 교육시민단체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시민권력으로서의 위상을 튼튼히 하여 국가권력의 교육정책을 민주화하는데 있어 대안적인 교육철학과 청사진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권위주의 시대의 안티테제가 아니라, 민주사회를 앞당기는 청사진을 제시하여 국가에 대한 대안적 헤게모니를 확보해야 한다. 교육현장을 실제 바꾸어내는 교육개혁의 새로운 담론(discourse)²⁰⁾과 실천 방

20) 담론은 세계에 대한 사고와 개념, 가치와 신념, 태도와 행동방식 등을 내포하고 있다. 담론은 스쳐가는 일방적 정보와 소통되는 언어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담론은 권력에 의해 형성된 이

안을 재정립하고, 국민적 설득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최근 신자유주의 바람이 교육부문에 불어오면서 공교육의 토대가 날이 갈수록 약화되는 현실에서 ‘경쟁력’, ‘효율성’, ‘시장’ 등의 개념과 논리가 깊이 침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육시민운동은 민주성과 공공성에 힘을 쏟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민주화되고, 공공성이 확립되어 사회와 국가 공동체의 책임 속에 모든 교육이 운영된다 하더라도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발전과 행복에 봉사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교육의 ‘창조성’ 개념은 ‘경쟁력’이나 ‘효율성’의 개념과 근접하지만 그것을 뛰어 넘어야 한다(주경복, 2003). 학교선택과 교육기회의 평등, 수월성과 평등, 자율성과 책무성, 상업적 가치와 사회정의, 전통과 해방 등의 대립이나 이분법도 넘어서야 한다. 자기주도성과 공동구성주의, 자율과 타율, 공동체와 인간주의, 교사의 자율적 전문성과 학부모의 상식적 참여, 기술공학과 휴머니즘, 공공선과 이익의 대립도 넘어서야 한다(Nelson, 1990). 특히 인권, 평화, 생명, 환경, 남녀평등 등과 같이 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가치 정립이 요구되는 미묘한 이슈들은 다양한 대안을 놓고 활발한 토론과 민주적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 새로운 담론을 생산해야 한다. 교육개혁의 철학으로서 감각적 실학주의와 자연주의, 비판적 사고와 정서적 공감의 조화, 정의와 배려의 조화, 절차적 정서적 민주주의, 본질주의(학문중심)와 아동중심주의(열린교육)의 결합, 새로운 권위의 형성과 공동결정 및 참여민주주의의 확대 등이 좀 더 철저하게 구현되어야 한다(Rich, 1988). 예체능을 포함한 문화교육의 문제, 도덕교육을 철학교육으로 바꾸는 문제, 토론수업의 전범을 만드는 문제, 교실과 학교를 민주적 공동체로 만드는 문제, 고등교육의 기초학문 문제 등을 비롯하여 교육자체의 틀을 함께 토론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2. 교육시민운동은 형식(절차)의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내용적) 측면의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내용의 민주주의는 민

데올로기가 아니라 세계를 새롭게 해석하고 설명하는 개념적 틀이다. 담론은 사회적으로 수용되어 의미있는 집단과 연결망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담론의 형성은 사회화, 탐구, 성찰, 대화 등을 통해 의미의 변형이 이루어진다(Matheson, 2000; Davision & Arthur, 2000).

민주주의가 자유, 정의, 평등의 원리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형태를 말한다. 민주주의가 보다 발전하려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조건에서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상태로 한 단계 성숙해야 한다. 그러한 조건이 갖추어지는 사회는 자유, 정의,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뜻에 따라 스스로 행동을 결정할 수 있고,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다양한 삶을 누릴 수 있으며, 자신의 특기와 적성에 따라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누구나 수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원칙과 규칙에 의하여 자원과 권력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이를 획득할 수 있는 조건과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또한 장애인, 병약자, 빈곤자, 무능력자, 부적응자들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그들도 부족한 가운데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민주주의라면 더욱 이상적인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 인권의 문제, 학생 개인의 자발성과 성장발달, 자신의 취미와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실천하는 문제 등이 실질적인 민주화, 내용의 민주주의를 채우는 일이 시급하다. 나아가 IMF 금융위기 이후 점점 심화되고 있는 계층간의 불평등의 심화에서 벗어난 소외계층의 교육권과 교육격차의 문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유아부터 대학 취업 사교육비 까지), 대졸 실업자의 증가 문제 등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완성시켜야 한다. 장애인 시설 문제, 지역공동체 교육 문제, 도서관 활동, 지역문화원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 동안 교육시민단체들이 벌여 온 사업을 통해 보면 교육운동은 몇 가지 제한된 방향에서 주로 정부나 국회 등 정치권을 향한 활동에 사업이 치중되어 상대적으로 교육현장의 일상적 사안들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그동안 일부 단체에서 급식문제, 교복 문제 등 부분적으로 현장 활동을 벌여 온 경험이 있지만 앞으로는 교육시민운동 진영 전체에서 연대하여 사업들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펼쳐 나가야 한다.

3. 교육시민운동은 학교가 더 이상 비민주와 비합리가 통하는 곳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참여와 자치로 가꾸어지는 민주적인 교육공동체이자, 민주주의의 체험장으로 변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실공간에서 교사와 학생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교실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고 대화가 없으며 무의미한 존재로 살아가는 교실환경을 학교의 민주주의를 통해 활성화하는 것이다. 교실과 학교의 민주화는 사회를 민주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준비시키고 내면화시키는 장기적인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적 지식과 경험을 갖게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축적하여 사회의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 단순히 반장을 뽑고 운영위원을 선출하는 일회성 행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들(교사, 학생, 학부모 등)의 적극적 참여를 학교에 요구하는 '강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사적 이익보다는 공동선을 위해 민주적으로 숙고하고 결정하는 공동의 삶의 양식으로서 공동선을 향해 함께 활동하도록 하면서 대안적 삶의 양식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시민의 양성을 격려한다(Jaddaoui, 1996: 74-77).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통해 교사와 학생의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가 고립되고 침묵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며 협력하는 존재로서 네트워킹하고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주체들의 목소리'를 내도록 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과 사회적 제약 사이의 긴장을 해결하고,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과 여러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권한을 민주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민주적 생활은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오랜 세월이 걸쳐 이루어지는 축적된 결과이기에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의 의사소통의 민주화가 시급하다. 교실의 구체적 민주화의 진지가 확고하지 못하면 파시즘의 망령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민주주의를 공고하게 하는 민주교육활동의 일상화가 필요하다. 교사들이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의 교육적인 권위와 자율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4. 교육시민운동은 교육현장의 가장 허약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을 ‘권능화’(empowering) 해야 한다. 학생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인권이 보호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회의 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생인권의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학생회의 법제화와 학생자치활동의 강화를 통한 민주주의의 완성 및 교양있는 시민의 양성을 위해 인권교육과 평화교육 그리고 민주주의교육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이런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어야 교양있고 성숙된 정치감각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성장될 것이다. 교실에서의 수업활동을 통해서 자주적으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민주적 소양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또 학생의 목소리를 크게 할 수 있는 학생회의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학생자치문화의 형성없이 민주주의의 생활화에 입문시키는 민주교육은 탁상공론이며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원초적으로 가로막게 된다. 오늘날 기성정치인들이 보여주는 반민주적 행태는 학창시절 생활로서 학습된 실천적 지식이 아니라, 대학입시를 위해 배워진 암기위주의 명제적 지식으로 학습되었기에 발생된 내재된 한계에서 비롯된 자승자박의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다.

5. 교육시민운동은 학교운영체제의 의사결정구조를 더욱 민주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 초중등학교의 주임회의나 부장회의가 대의적 민주주의 성격을 떠나 교장의 자문적 역할에 머물고 있고 전체교사의 중의를 모으는 데는 취약한 구조이다. 학년별 교과별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를 교무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가 필요하다. 또 자문기구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로 변화시켜 지역사회와 학교의 유기적 결합을 더욱 확고하게 해야 한다. 교육권력구조의 민주화를 위해 교실의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학급학부모회가 활성화되지 않는 조건 속에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은 학부모의 주체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6. 교육시민운동은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학교자치의 정립을 위해 교장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실을 멀리하고 승진에 모든 교육적 생애를 거는 현행 교장제도의 혁신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안적 교장제도로 제기되고 있는 교장선출보직제는 단지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민주적인 학교운영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을 넘어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의견과 인권이 확실하게 존중되고 수업은 물론 생활 속에서 올바른 민주주의를 체험적으로 배울 수 있게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교장선출보직제는 교육관료들과 학교장의 손에 있던 학교를 학교 구성원들과 지역사회로 되돌리기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다. 학교자치의 근본 목적은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구성되고, 그런 학교 자치조직의 명실상부한 대표자들을 통해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수렴·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7. 교육시민운동은 기존학교의 대안교육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체제의 대안교육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데 있다. 대안교육은 탈학교론(deschooling)에서 '재학교론'(reschooling), 즉 '학교 다시 살리기론'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 대안교육연구가는 몬테소리 교육, 발도르프 교육, 프레네 교육 등을 조사연구한 결과 공통적으로 모두 적극적 인간관계 맺기, 총체적 학습(지적 정서적 미적 학습의 융합) 모색, 민주적 학교참여, 학부모와의 동반자 관계 형성, 지역사회에의 참여, 지속가능한 생태적 교육환경의 실현 등을 교육의 주요 목적으로 두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Carnia, 2003). 이를 보면 대안교육의 실천도 학교교육에서 마땅히 이룩해야 하는 교육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즉 참교육이 대안교육이라고 보여진다. 우리는 지금 대안교육의 붐 속에서 대안교육의 철학부재로 오도된 대안교육의 허상, 즉 문제가 학교 또는 입시교육 중심의 특수목적학교로 이해하는 왜곡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 학교가 제도화되고 관료화되면서 수없는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래서 자살의 낭떠러지로 몰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가운데 학교

를 탈출하고자 하는 집단적 이탈의 움직임이 존재한다. 이런 탈학교화 현상을 막아야 한다.

8.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 내면성의 자율화가 함양되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개인적 자아의 내면성이 존재하지 않을 때 절차적 제도적 장치만으로 성장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발전은 한 사회의 시민의 성격, 시민의 질적 내용, 공공선과 사회공동체에 대한 헌신, 공적 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등 시민의 덕과 태도와 깊이 연관된 ‘적극적 시민’이 요청된다(최장집, 2002: 226-227).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기존의 권위주의 관행과 생활양식, 행동양식, 가치 및 태도 등을 혁신하는 생활세계의 민주화를 위한 생활정치적 개혁을 위한 교육시민운동을 벌여야 한다. 작금 한국의 시민들은 여전히 권리는 누리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인간형에 속하고, 선거 이외에는 공공영역에 참가하려는 의지를 갖지 않는 무임승차형 ‘가족개인’(family individual)의 경향을 강하게 보이기에 ‘공적 개인’으로 도약하는 과제가 시급하게 요청된다(김동춘, 2000:11). 비판적 대항 헤게모니를 모색하는 것과 함께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문화의 구축이 동시에 필요하다. 저항 헤게모니를 구축하는 시민사회의 일차적인 기획에 목표를 둔 준 그람시의 전략을 시도하면서도 시민사회의 쇠퇴를 역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제도적·문화적 자원을 재활성화에 목표를 둔 퍼트남의 전략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²¹⁾ 교육시민운동은 한편으로 사회변동의 주체로서 재등장해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탈정치화와 상품화의 덫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시민권의 요구운동과 함께 시민다움

21)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그리고 경제성장은 시민적 덕목의 축적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 시민적 덕목은 사람들 사이에 공동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창출하는 수많은 자발적 연결망과 결사체를 통해 배양된다. 시민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간의 미시적 협력을 기초로 형성되는 이런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연결망·규범·신뢰 등을 퍼트남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 규정한다. 이 사회적 자본이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과 참여를 창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성숙시킨다는 것이 그의 핵심 테제다. 그람시와 퍼트남의 이런 시민사회론은 흥미로운 대조를 이룬다. 그람시의 강조점이 시민사회에 내재된 지배와 피지배의 동학을 해부하는 데 놓여있다면, 퍼트남의 강조점은 시민사회에 내재된 사회자본의 중요성 부각에 맞춰져 있다.

을 위한 시민적 생활태도가 요구된다. 형식적 민주주의의 확대가 내용을 채워나가지 못할 때 운동의 대의가 흐려질 위험이 있기에 교육시민운동 진영은 자기 내부에 대한 자기성찰적 자세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9. 그동안 교사단체와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전개해온 민주교육 실현을 위한 참여, 그리고 교원노조운동, 학부모운동이 펼친 민주화 운동의 수준은 이제 ‘자기주장 내세우기’ 수준을 넘어 ‘남의 주장 듣기’, 나아가 남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한 문제해결의 수준으로 발전해야 한다. 형식의 민주주의에서 제기될 수 있는 자기표현의 단계에서 토론과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한 단계 발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남의 주장을 이해하고 토론하고 조정하려는 상호소통적인 주장의 수준에는 아직 멀었다고 본다.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듣는 사람이 있고, 그래야 그들의 주장을 수용하는 풍토가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은 아직 ‘형식의 민주주의’(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형태)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규칙과 질서가 서 있지는 않다는 말이고,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규칙과 질서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10. 현재의 정치지형 속에서 교육시민운동의 진영 준비가 요구된다. 우선은 주어진 정세와 사회운동 지형의 변화에 연동하여 교육시민운동 진영의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국정운영 흐름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처하는 체계가 부족하고, 민중 영역과 시민 영역의 분화 속에서 각 영역의 현실적 주체화와 대상화 전략이 미비하며, 보수적 운동 진영의 흐름에 대한 진보진영의 합리적 대오가 갖춰지지 않고 있다. 그 동안의 교육운동은 행정적, 법률적, 정치적, 사회적 제도의 개혁에 많은 관심을 쏟는 반면에 교육자체의 행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홀한 편이었다. 말하자면 교육의 그릇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교육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는 관심이 적었다는 것이다. 교육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함께 고민될 필요가 있고, 교육시민운동은 그 모두를 입체적으로 결합해야 할 것이다. 이제 민주화 세력이 집권하게 됨에 따라 교육시민진영의 새로운 운동방식과 실험을 요구받고 있다. 보다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교육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해 잘못된 교육관이나 교육세력을 잠재울 수 있는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 진정한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민주화는 국가권력을 향한 민주적 요구와 시민적 결속 그리고 단위현장에서는 동료교사들과의 의사소통과 진지한 대화적 관계의 지속, 학생들과의 끊임없는 만남과 실천 속에서 꽃피우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문구(2003). **한국 민주화의 비판적 탐색**. 당대.
- 김정훈(2003). '전환기의 시민사회와 시민사회운동의 미래'. **민주사회와 정책 연구**. 민주사회정책연구원. 한울.
- 김동춘(2000). '민주주의와 시민단체, 시민운동'.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민주주의 포럼 제 1회 월례발표회, 11월 18일.
- 김호기(2001). **한국의 시민사회**. 아르케.
- 시민사회포럼·중앙일보시민사회연구소(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아르케.
- 심성보(2002a).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문제와 민주적 공동체교육의 모색'. **교육비평**, 8호.
- _____ (2002b). '민주주의의 교육적 함의와 민주교육의 실천화 방안 모색'. **처음처럼**, 7-8월호.
- _____ (2003).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과 교육민주화의 과제', 교육사학회 창립39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11월 22일.
- 유팔무, 김호기 엮음(1995).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 조희연(2000).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의 역사, 현황과 전망'. **NGO란 무엇인가**. 아르케.
- _____ (2003). 노무현 정부 100일 평가 발제문. 한겨레신문사와 참여연대 공동주최.
- 주경복(2003). '한국의 현실과 교육운동의 진로'. 8월 2-3일. **교육연대 워크숍발제문**.
- 주성수(2001). **시민사회와 NGO운동**. 한양대학교출판부.
- 최장집(1989). '민주화의 두 개념-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한국현대 정치의 구조와 변화**. 까치.
- _____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 한만중(2003). '노무현 정부 교육정책과 교육운동의 방향', 8월 2-3일. **교육연대 워크숍발제문**.
- Carnia, F.(2003). *Alternative Approach to Education*. RoutledgeFalmer.
- Davision, J. & Arthur, J.(2000). 'Education and citizenship', Matheson, C. & D.(eds.). *Educational Issues in the Learning Age*. Continuum.
- Jaddaoui,N.H.(1996). 'Building Bridges toward Democracy', L. E. Beyor(ed.). *Creating Democratic Classrooms*. Teachers College Press.
- Matheson, C. & D. (2000). 'Educational Spaces and Discourses', Matheson, C. & D.(eds.). *Educational Issues in the Learning Age*. Continuum.
- Nelson, J. L., Palonsky, S. B. & Carlson, K.(eds)(1990). *Critical Issues in Education*. McGRAW-HILL.
- Putnam, R. D., 안청시 외역(2000).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박영사.
- Rich, J. M.(1988). *Innovations in Education*. Allyn and Bacon.
- Stevens, E. & Wood, G. H.(1992). *Justice, Ideology and Education*. McGRAW-HILL.